



이헌목

(농림수산부 축정과장)



개방화에 대응한 축산업 발전방향

1. 우리 축산업의 여건 전망

지금 축산업을 포함한 우리 농업은 가혹한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89년 가트국제수지위원회(BOP) 졸업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에 따라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주요 축산물의 수입 자유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축산업은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촌노동력의 급

격한 감소와 환경규제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부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한 축산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 단체 및 언론 등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 한국 축산의 문제점

위와같은 상황에 처한 한국

축산의 현실을 보면

첫째, 아직도 대부분의 농가가 부업형태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방의 확대가 가속화되어 가격이 하락하고 마리당 수익이 감소하면 많은 양축농가가 사육을 포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축산은 축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하나 대부분 경종농업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규모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업농규모는 5% 수준밖에 안되는

〈표1〉 축종별 사육현황

(1993.3 현재)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참여 농가	585천호	28	87	167
사육두수	2,007천두	515	5,168	77,549
평균두수	3.4두	18.5두	59.3두	464.6
전업규모	100-200두 1)	40-50두	1,000-2,000두	2-3만수
전업규모이상비율(농가)	0.03%	5.5	0.6	0.9
전업농가의 사육비율	2.0%	18.5	24.5	0.6

1)10두 내외의 부업형 병행 육성

매우 영세한 규모이며 생산성도 역시 낮은 실정이다.

규모면에서 외국의 양축농가와 경쟁하면서 장래 우리 축산을 이끌고 갈 주체가 매우 적다는 뜻이다.

둘째, 축산할 땅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축산경영의 규모화, 전업화와 더불어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부각되면서, 축산이 농촌에서조차 혐오산업시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산단지조성이나 축사의 신·개축사업들이 주민들의 집단항의 등으로 도처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오랜동안 정부주도의 생산계획이념 및 가격통제, 물량위주의 수급개념 등으로 양축농민들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시장대응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를 생각하고 품질을 높이겠다는 사고는 부족하고, 단기적인 이윤극대화

“

가족단위 전업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개방화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축종별, 규모별 적정 경영모델을 정립하고, 축사 신·개축, 시설자동화 등을 통해 일정한도 내에서 양축농가의 투자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

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정부의 지원과 가격보장의 요구 목소리가 높고, 개방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설마하는 생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의 하나이다.

넷째, 축산물의 유통분야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우리 축산물은 대부분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에서의 불리함을 품질

경쟁으로 극복해야 우리 축산물이 수입개방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직도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제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축산물을 구입했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축산물은 일반농산물과 달리 도축·가공 과정을 거쳐야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축산물의 품질이 좌우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이 분야에 헌신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투자 역시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축·도계시설이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생산전후의 모든 과정의 경쟁력의 총합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양축농민이 아무리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한다해도 최종제품은 도저히 수입 축산물과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체계개선 및 유통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의 축산기술수준은 미국이나 구라파의 축산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종축개량분야, 유전공학을 이용한 첨단기술분

야, 축산기기분야 등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 또한 농가단위에서 응용되어야 할 컴퓨터 경영기법, 자동화시설분야,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정화분야 등 현장애로를 타개할 경영기술분야의 낙후성은 조속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축산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교육체계도 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섯째,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종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 축산업을 구성하는 관련 산업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의 경쟁력은 종돈업, 비육업, 사료업, 동물약품업, 도축업 및 가공·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제단계에 있어서의 경쟁력의 총화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 양돈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산업들은 각 단계마다 선진국에 비해 비능률을 안고 있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요인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에게도 그 비용이 일부 전가될 수 있지만, 개방화시대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능률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3. 축산정책의 방향

개방화시대에 대처하여 우리 축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농가의 소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시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가. 축산정책의 목표와 기본 전략

축산정책의 목표는 축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소득산업으로

또한 추진체계를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농민의 자율적인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금지원도 사업별·부분별 접근방식에서 생산자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예를들면 정부는 축종별 단위사업과 지원기준,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만 제시하고, 이에 따라 농가가 사업계획서를 작



육성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값에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한편, 질병없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즉, 기존의 자급을 제고 및 가격지지 위주의 정책에서 전업농 육성 등 경쟁력제고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성 제출하면 종래 축사시설 개선사업자금, 기계화사업자금 등 개별사업별 지원방식을 바꾸어 농가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통합하며 양축농가에게 자금이 종합 지원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원대상농가의 선정도 종래 행정기관 주도방식에서 생산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에서 하도록 할 계획

이다.

또한 지난 '90년도에 마련한 축산장기발전계획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수정하여 축산 5개년('93-'97)계획을 '93년도 중에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나. 축산정책의 방향

첫째, 가족단위 전업농가를 집중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개방화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축종별·규모별 적정 경영모델을 정립하고, 축사 신·개축, 시설자동화 등을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일정한다 내에서 양축농가의 투자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책추진을 통하여 '97년 이후에는 한우비육,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로 전업농가에 의한 사육비율이 50%수준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적절한 축산입지를 확보하고, 규모화·협업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돈과 양계는 단지화하여 축산분뇨의 공동처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재공동구입 및 공동출하로 원가절감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 업체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비율이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축산마을」로 조성하

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완전개방화 시대에서도 양축농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양축농가들에게 인식시키고 정부와 양축농가의 역할을 분담하여 정부는 구조개선, 인력개발, 교육, 기술개발 등의 기반조성 분야를 담당토록 하고, 양축농민은 생산성 향상노력, 협동에 의한 생산의 안정화 및 유통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수입개방에 품질보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품질과 서비스에 따른 가격차등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가의 품질에 따른 차등화를 확대하고, 육류의 부위별·등급별 가격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상표부착은 부분육 형태의 유통으로 전환하며, 한우전문판매점 등의 확대 등을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다. 그외에도 낙후된 도축·도계장시설을 현대화하여 위생적인 도축·가공을 제도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다섯째, 축산기술향상을 위하여 가축개량체계의 정립과 산·학·관·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애로를 타개하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축종별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또는 생산자 조직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 기술연찬회나 박람회 개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양축농가에 대한 해외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섯째, 축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산업의 국내경쟁체제를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종돈, 사료, 동물약품, 도축, 도계, 가공산업 등의 인·허가요건을 대폭완화하여 신규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축진을 통하여 각 분야의 비능률을 제거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영위여장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법 및 농지관련법 상에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의 제도개선과 축산에 대한 재정 및 세제상 지원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추진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사료곡물의 무관세화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4. 결론

지금 우리농업은 국제

화·개방화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하루속히 경쟁력을 갖춰가는 길 뿐이다. 정부는 축산업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장기 발전대책을 비롯한 각종

장·단기 시책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축산인」 창의와 노력이 라고 할 것이다. 양축농민 각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자기자신이 생산한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축산 관련인들의 상호협조와 자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물론 농민과 생산자단체가 새로운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 나간다면 위기는 기회로 전환되는 날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

자 동 화 설 비

- 금 이 : 오거, 디스크, 습식금이기
- 환 기 : 송풍, 배기, 분무시스템
- 보조사료 : 하이블랙, 이-에이드
- 기 타 : 국내외 양돈기자재



신용을 신조로 하는

건 지 축 산

주소 : 전북 이리시 동산동1046-2

전화 : (0653) 842-0255~8